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활용한 국내 환경 예산 분석과 분류 체계 보안점 고안

Analysis of the Domestic Environmental Budget and Strengthening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Using the Green Taxonomy

김명주,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연구 배경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완화와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 등을 발표하며 민간 공공 부문에 서의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내 외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 재정을 어떻게 투명성 있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공과 민관 부문을 통합하여 기후 재정을 파악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부문별 감축과 정책에 특화된 분류인 이행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재정 계획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기후예산제도 활용되고 있으나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 필요성

국내외 환경 분야 기후 재정 파악을 위한 체계는 산업계와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달리 나타난다. 전체 기후 재정 흐름 파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관 체계의 통합이 필수적인 실정이다. 이에 주로 민간 산업 분야에서 환경 경제 활동 분류에 사용되는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예산안을 살펴보고, 예산 사용 자체의 시사점과 함께 녹색분류체계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24 한국 정부 예산안 수집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 환경 분야 해당 사업 1차 선별 - 예산안 사업 중 환경 분야 해당 사업만을 선별
 - 환경 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활동인가?
 -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인가?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인가?
- 환경 예산안 분류를 위한 기준 체계 설정 - 활용 가능성 고려 분류 용이 체계 선정 (탄소중립기본계획, 녹색분류체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기후예산제)
- 녹색분류체계 개편안 기준 및 항목을 고안 - 환경 예산 중 기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식별, 보완 항목을 제안하여 체계 개편.
- 녹색분류체계 개편안을 활용하여 예산안 분석을 진행 - 개편안 기준으로 예산안 재분류 및 상세 분석 (환경 분야별, 부처별, 회계별, 감축 및 적응 분야별)

연구결과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개편 결과
국가 예산안 분석을 위해 활용될 것 임을 고려하여 재정투자(기금, 융자, 펀드, 통합), 그린 ODA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하였고, 그린 R&D(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예산을 별도로 구성하여 직접 환경 대응 사업과 간접 환경 대응 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녹색분류체계는 대개 민간의 녹색활동의 가이드로서 활용되지만, 국내 예산안과 같은 다양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개편 녹색분류체계 활용 예산안 분석 결과
 - 환경 분야별 환경 예산

분야별 분류	사업 개수	예산 (단위:백만원)	순위
온실가스 감축	35	2,325,586	3
기후변화 적응	41	2,857,420	1
그린 R&D	50	548,691	9
물	24	2,541,792	2
ODA	8	1,477,224	6
재정투자 (통합)	43	2,190,636	4
재정투자 (융자)	5	964,918	8
재정투자 (기금)	7	2,058,368	5
재정투자 (펀드)	2	65,250	11
순환경제	16	275,921	10
오염	4	15,992	12
생물다양성	34	1,198,241	7
총계	269	16,520,039	

[표1. 환경 분야별 환경 예산]

2024 환경 분야 전체 예산은 16조 5,200억으로 전체 대비 약 2.5%에 해당한다. 환경 분류별 예산 비율로 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물,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각각 1, 2, 3순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물 수요관리 항목 예산이 40.25% 정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2) 부처별 환경 예산

부처별 환경 예산을 보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조 2,066억, 농림축산식품부는 3조 737억, 기획재정부는 2조 3,014억 집행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환경부 예산의 42.64%가 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적응 분야 예산은 5.25%에 불과하여, 물 분야 예산을 제외하고 감축, 적응 분야 예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회계별 환경 예산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예산에서 농업재해보험, 농업자금 이차보전에 46.7% 정도가 사용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76.6%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사용되었다.

(4) 적응, 감축 분야 환경 예산

적응 분야 예산은 2조 9,010억으로 이중 농업 분야 예산이 72.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상이변 등 재난과 안전 중심 대응 예산 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주요사업인 농업재해보험, 비축지원 등의 경우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농업 분야의 장기적 전략 기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감축 분야 예산은 3조 5,587억으로 전체 환경분야 예산의 약 21%에 해당한다. 비중 있게 편성된 에너지 전환 부분의 사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분	사업 개수	예산 (단위:백만원)
기후변화 적응 (직접 관계 활동)	41	2,901,245
기후변화 적응 (R&D 포함, 재정투자 '기타' 제외)	50	2,923,075
기후변화 적응 (R&D 포함, 재정투자 포함)	65	5,335,780
온실가스 감축 (직접 관계 활동)	35	2,290,508
온실가스 감축 (R&D 포함, 재정투자 '기타' 제외)	88	3,558,739
온실가스 감축 (R&D 포함, 재정투자 포함)	107	5,467,357

[표2. 적응, 감축 분야 환경 예산]

더불어, 단순 감축이 아닌 기존 흡수원으로서의 농업 분야 역할 고려해야 한다. 감축/적응 분야 R&D 포함 유무에 따른 예산 비교 결과 R&D 포함 전후 차이가 적응 분야에 비해 감축 분야가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분 그린 R&D의 주요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R&D),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기술개발(R&D),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R&D), 발전 에너지분야 그린 R&D로 발전 에너지 분야 R&D 의존도 감소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국내 기후 재정을 파악하기 위한 민관 통합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 국내 예산안의 환경 재정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 부문별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 유용하였으나 그린 ODA, 그린 R&D 및 재정투자 항목 추가 등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예산안 상세 분석 결과 적응 분야에서는 재난 및 안전 대응 예산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장기적 전략보다는 재난 대응에 치중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감축 분야에서는 발전 에너지 분야 R&D 의존성이 두드러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과 같은 직접 감축 사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예산이 녹색경제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녹색분류체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환경 분야 재정 관리는 민관 통합 시스템이 존재하기 않기에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환경 전 분야 재정 통합 관리를 위한 세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과 정책이 환경 목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